

이재명 “신산업 집중육성 경제강국 실현”

AI 예산비중 선진국 수준 증액
계엄 통제 강화, 검찰·사법개혁
상법 개정·세종 행정수도 완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 중에는 주주중심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 등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범식 및 첫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 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

자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서울=김현수 기자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법인·상속세 최고세율 ↓
AI·에너지 3대 강국 약속
GTX 광역권 확장 청사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2일 기업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설득해 120만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세제 정비·투자 활성화를 추

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에는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간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 공약으로는 ‘3·3·3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계획이다.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몰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을 추진한다. 부동산 제도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가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찾아 상인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 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공약으로 담겼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와 사회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서울=김현수 기자

이준석 “대통령 권한분산·3부총리제”

19개 부처 통합 13개로 개편
해외이전 국내기업 ‘리쇼어링’
‘넌 만큼 받는’ 연금제도 약속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비롯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여수시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

사회복지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통해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넌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

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 출신 국가 핵심 인재에 대해 연구비 지원과 특례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놨다. 서울=김현수 기자



모집기간 2025. 4. 21. ~ 5. 15. 18:00

선발대상 도내 고교재학생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동아리

선발규모 20개 모임 / 모임당 5명 내외(지도교사 포함)

분야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자유

지원금 모임당 6백만원의 연구활동비

접수방법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jntle.kr)

문의처
· 전라남도 의량인재육성과(061-286-3433)
·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061-285-9483)

전라남도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